

FIS ISSUE & FOCUS

발행인 박용주 발행처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남대문로5가 537) 메트로타워 T 02)6908-8200 F 02)6312-8959

작성 박정수 부연구위원 기획·조정 심혜인 결산정보분석부장 편집간사 우수연 연구원

재정성과관리제도

- 1 들어가며
- 2 재정성과관리제도 개념 및 용어 정의
- 3 2021년도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 결과
- 4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 5 나가며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재정성과관리는 단순 예산·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을 결과 또는 산출 지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정이 하는 일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01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을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고, 사전 목표와 사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전체에 대한 총량 관리에서는 보지 못하는 미시적인 부분까지 재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총량 관리와 보완적인 관계임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되고, 지출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정을 중장기 시계로 확장시켜 줌
- ▶ 우리나라는 예산안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할 시점
 - 정부는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사업 평가 개편, 지원 인프라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FOCUS 재정성과관리 관련 주요 쟁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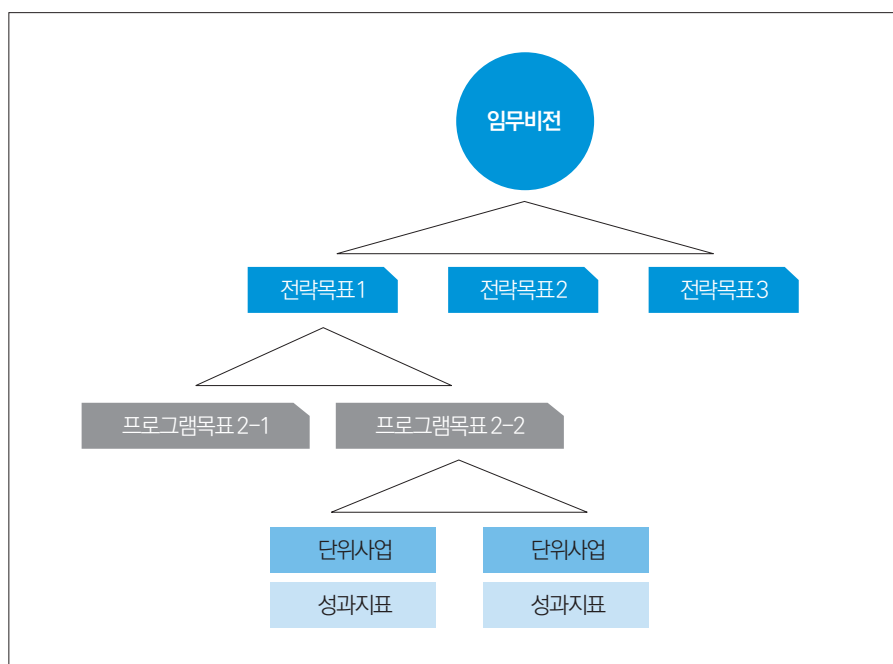
- 「국가재정법」상의 재정사업 평가인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 범위, 효과, 개편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 재정성과관리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또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 필요

02 재정성과관리제도 개념 및 용어 정의

▶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념과 목표

- ▶ 재정사업의 기획에서 집행, 환류, 종료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정보시스템 지원 노력은 국제기구의 권고부터 각국 정부의 업무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재정 운영 노력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OECD, World Bank 등은 2000년대부터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어 성과 정보를 생산할 것, 편성과 집행, 환류에 이르는 재정의 전 과정을 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
- ▶ 재정성과관리는 지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의 달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 재정의 목적 달성 여부는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측정 수단을 구비하여 계획 대비 집행 성과를 수집하고 이 성과 정보를 환류하여 차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프로그램 예산체제는 각 부처에서 동질적인 사업의 묶음인 프로그램을 예산 편성 착수 전에 미리 결정하고 성과목표 수준도 함께 정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내의 사업 간 비교 기준이 명확해지고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에 환류하기가 용이

〈그림 1〉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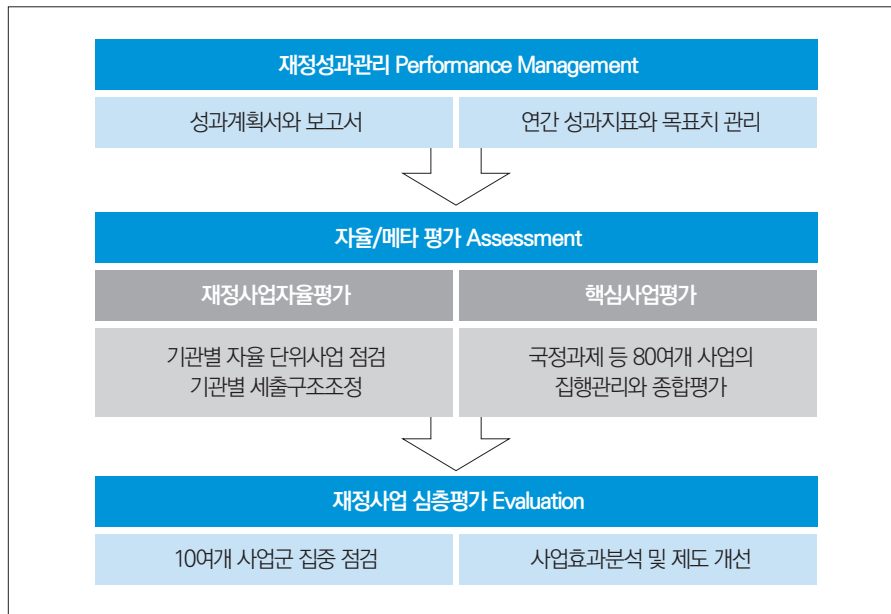


- 사업을 임무와 전략 체계에 따라 구조화하고, 프로그램, 단위사업별 성과지표를 구비하여 재정 투입 성과를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체계화
- 따라서 재정성과관리 체계는 사전 목표에 대한 사후 측정 및 평가, 유사한 사업 묶음 간의 표준화된 비교를 위한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발전을 함께 수반
- ▶ 재정성과관리는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수행
 - 재정성과관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
 - 각 부처는 성과계획서·보고서 외에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를 수행하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표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 성과관리의 목적은 정부 재정의 투명성·책임성, 효율성·효과성, 예산재분배 등이 있음
 - 사업 전략체계별 자원 배분, 성과목표와 달성도, 주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향상
 - 연간 성과관리 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을 사업 관리에 환류(managerial feedback)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효과성을 향상
 - 정책 우선순위, 더 효과적인 사업·정책으로 재원을 재배분함으로써 배분적 효율성 향상

▶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의의

-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관리, 사업 또는 사업군별로 수행되는 평가를 통해 거시적 재정총량 위주의 관리와 개별 부처의 재정 최하단부의 재정사업 관리체계를 연결해줌
 -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에 대한 등급을 매기거나, 사업에 대한 자원 투입 적정성 및 사업 추진체계를 검토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는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and Rating Tool)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초기 등급 강제 배분 방식의 평가에서 점차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제도가 발전해 오고 있음
 -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2017년까지는 전수 사업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한 제도 개선과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
 - 또한 재정당국은 개별 부처 위주의 자율평가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하여 종합적 개선 방안을 도출

〈그림 2〉 재정성과관리 개념



▶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

- ▶ 우리나라는 2006년 4대 재정개혁을 통해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전환, 프로그램 단위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운영하고 있음
 - 2006년 이전의 예산·결산 재정운용 체계는 최하단의 개별 세부사업을 먼저 설정하고, 매년 사업의 성격을 검토하면서 입법과목인 장·관·항으로 묶어 올라가는 상향 편성 방식으로, 사업을 묶는 기준도 모호하고 사후 정보를 바탕으로 환류도 어려움
- ▶ 「국가재정법」상 규정된 재정성과관리제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비된 재정관리 제도로 볼 수 있으나, 그 외에도 여러 근거법령에 의해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수행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운용의 평가, 「국고보조금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운용평가,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기금 운용·관리평가 등의 평가제도를 운영
 - 개별 부처는 다부처 사업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 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사업 평가(행정안전부), 지역발전사업 평가(균형발전위원회), 일자리사업 평가(고용노동부) 등 다기한 평가제도에 의한 평가 수행
 - 재정관리체계가 복잡하게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는 각각 관리·평가제도 간 정합성 확보, 합리적 운영을 통한 재정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동 법에 의한 재정사업 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재정사업 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간의 관계를 최초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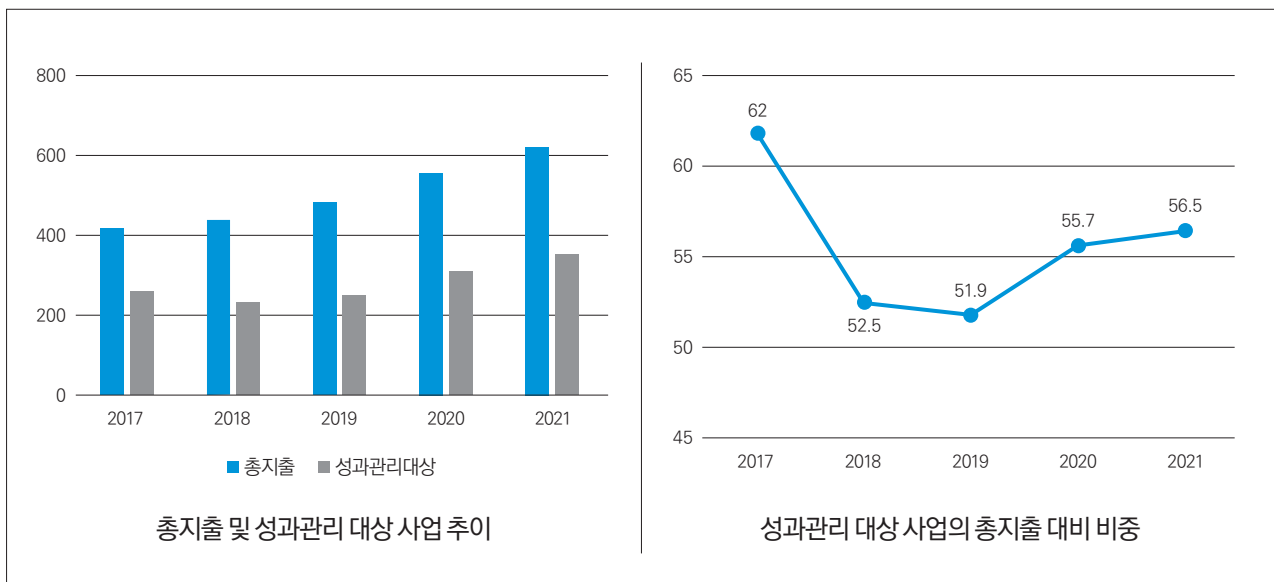
03 2021년도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 결과

▶ 재정성과관리 달성도

- ▶ 정부는 지난 5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2021년도 성과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를 담은 성과보고서를 제출
 - 성과계획서는 사업 실시 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성과 목표 및 지표,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으로, 성과 달성을 위한 집행 및 환류계획을 명확히 하여 작성
 - 성과보고서는 기관의 성과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집행 및 예산 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
- ▶ 성과관리 대상 사업은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총 346.5조원으로 2021년도 예산(추경 기준) 총지출 대비 56.5% 차지
 - 성과관리 대상 사업은 예산 편성 시에 확정하고, 추경 시 금액 및 목표 등을 수정하며 연중 관리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중의 개략적 추이를 보면 2017년 보훈처, 인사혁신처 등의 경비, 인건비 등 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한 후 소폭 증가세

〈표 1〉 최근 5년간 성과관리 대상 사업 규모 추이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지출(추경)	411.4	432.8	475.0	548.9	613.4
대상	255.2	227.4	246.7	306.0	346.5
비율	62.0	52.5	51.9	55.7	56.5

자료: 대한민국 정부, 각 연도, 성과계획서.

- ▶ 프로그램 성과관리를 먼저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183개 전략목표에 대해 475개 프로그램 목표, 680개 지표를 설정, 521개 달성(달성률 76.6%)
- 전반적으로 목표, 지표 수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달성률이 크게 떨어진 2020년을 제외하면 75~77%를 유지

〈표 2〉 최근 5년간 프로그램 성과관리 현황

(개, %)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A)	달성지표(B)	달성률(B/A)
2021	183	475	680	521	76.6
2020	181	470	676	466	68.9
2019	178	466	677	517	76.4
2018	182	495	698	538	77.1
2017	182	522	746	560	75.1

- 주요 부처별로 보면, R&D 사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가장 많은 성과지표를 설정, 달성률도 높게 나타남
- 프로그램 목표를 10개 이상 설정한 주요 부처 중 고용노동부(55.6%), 국방부(50.0%) 등의 달성률이 낮게 나타남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고 사망률 달성도(82% → 70%), 신산업·신기술 분야 훈련 과정 참여자 수 지표가 크게 하락(달성률 123% → 80%)
 - 국방부는 군시설이전사업 완료율(89%), 군수지원 정시도착률(90%) 등이 낮게 나타남

〈표 3〉 2021년도 주요 부처의 프로그램 성과관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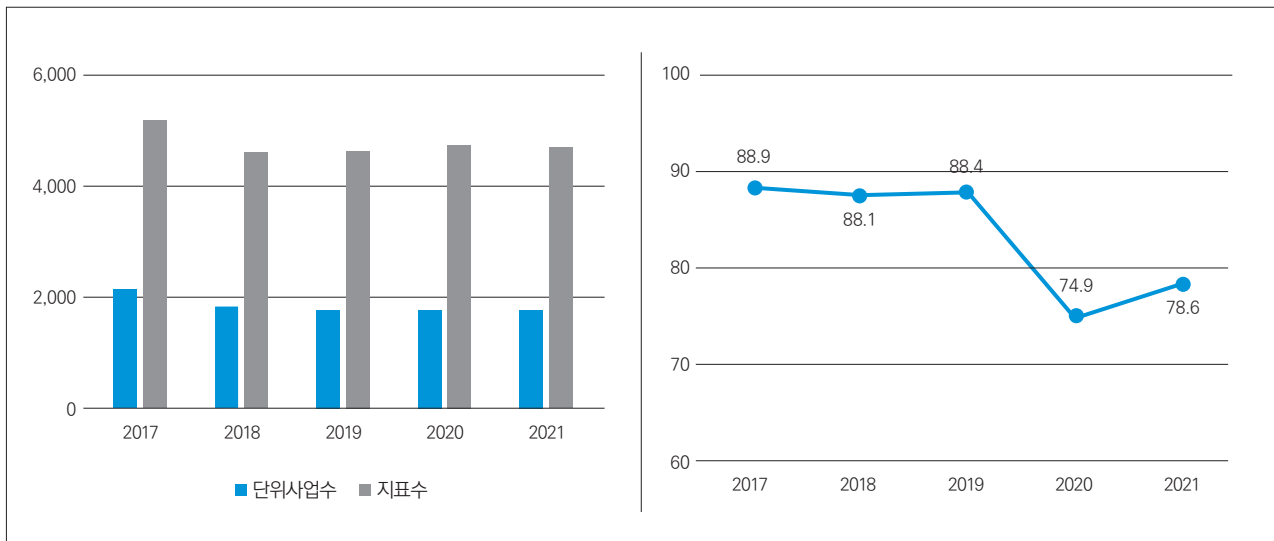
(개, %)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34	49	5	42	2	95.9
국토교통부	7	34	41	4	24	13	68.3
문화체육관광부	6	33	37	3	24	10	73.0
보건복지부	4	27	31	1	21	9	71.0
산업통상자원부	6	25	29	4	17	8	72.4
교육부	4	18	28	2	17	9	67.9
환경부	5	18	27	2	24	1	96.3
행정안전부	6	18	27	0	22	5	81.5
농림축산식품부	4	16	26	1	20	5	80.8
기획재정부	4	14	24	1	18	5	79.2
외교부	6	12	24	6	12	6	75.0
해양수산부	3	14	21	0	15	6	71.4
고용노동부	5	11	18	0	10	8	55.6
중소벤처기업부	6	12	16	2	11	3	81.3
식품의약품안전처	10	11	15	1	13	1	93.3
금융위원회	4	11	14	3	8	3	78.6
국방부	5	11	14	0	7	7	50.0

- ▶ 다음으로 단위사업 지표 관리의 경우 2021년 1,769개 단위사업 4,711개 지표 중 3,703개 지표가 목표 달성(달성률 78.6%)
 - 2019년 이전에는 88%대 달성률을 보였으나 2020년 크게 하락
 -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당초 설정한 목표 대비 성과 목표 달성 부진
 - 초과달성 지표 수 비중은 유지
 - 초과달성 지표는 목표 대비 성과가 130% 이상인 것을 의미

〈표 4〉 최근 5년간 단위사업 성과관리 현황

(개, %)



	단위사업	지표(A)	달성(B)	달성률(B/A)	초과달성(C)	초과비중(C/A)
2021	1,769	4,711	3,703	78.6	449	9.5
2020	1,774	4,733	3,543	74.9	433	9.1
2019	1,771	4,633	4,094	88.4	426	9.2
2018	1,839	4,617	4,069	88.1	410	8.9
2017	2,142	5,191	4,613	88.9	457	8.8

- 100개 이상의 단위사업 지표를 설정한 14개 부처의 지표 달성률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부처별 달성률은 최대 94.2%(환경부)에서 최소 63.5%(고용노동부)까지 나타남
 - 국토교통부(74.9%), 보건복지부(72.2%), 해양수산부(76.9%)는 평균 수준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취업자수 지표(달성률 '20년 101% → '21년 77.9%) 등 고용 관련 지표가 하락
 - 산림청은 경기불황등으로 임업인 경영 악화에 따른 용자 사업의 지표 등이 부진(귀산촌인 창업자금 수혜자 수 달성률 '19년 136.4% → '21년 52.2%)

〈표 5〉 2021년도 주요 부처의 단위사업 지표 관리 결과

(개, %)

	지표(A)	달성지표 수(B)	달성률(B/A)	초과달성 지표수(C)	초과비중(C/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6	345	85.0	46	11.3
국토교통부	370	277	74.9	46	12.4
보건복지부	331	239	72.2	25	7.6
해양수산부	277	213	76.9	22	7.9
산업통상자원부	271	220	81.2	30	11.1
문화체육관광부	244	185	75.8	37	15.2
고용노동부	230	146	63.5	17	7.4
환경부	226	213	94.2	16	7.1
농림축산식품부	211	187	88.6	21	10.0
행정안전부	203	174	85.7	19	9.4
교육부	186	151	81.2	13	7.0
국방부	138	95	68.8	5	3.6
중소벤처기업부	133	116	87.2	13	9.8
산림청	103	72	69.9	10	9.7

▶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환류

- ▶ (추진 방향) '22년도 재정사업평가는 전년 대비 ① 평가 확대, ② 평가의 환류 기준 강화, ③ 의무적 지출구조조정 제도입 추진
 - (전년 대비 변화) 미흡 등급 배분 기준, 지출구조조정 기준을 도입하여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방향 제시

〈표 6〉 자율평가구조조정 제도 전년 대비 변화

	2021년	2022년
지출구조조정 기준	부처의 자발적·주도적 추진 부처 차관 주재 구조조정 추진TF 구성	각 부처별로 사업별 성과 목표달성도를 상대평가
평가 환류 기준	없음	(부처) 하위 15%를 미흡 등급 배분 (재정당국) 관련 예산 1% 구조조정 추진 예산 규모 기준 등급 배분 도입하여 소액사업 미흡 등급 배분 관행 방지
기준	부처의 자율적 판단(10조원 내외)	의무적 지출구조조정(1.5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 4. 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 4. 1.

- ▶ 전 부처 총 178조원 규모의 1,186개 사업 중 '22년 완료 사업, 의무지출 사업 등을 제외한 148조원의 1%인 1.5조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
 - 사업별 성과의 목표달성도를 상대평가하여, 전체 사업의 하위 15%를 미흡 등급으로 배분
 - 등급 배분 기준에 사업수(하위 15%) 이외에 예산 규모(예산의 5%)를 추가하여 소액 사업 위주로 미흡 등급 배분되는 관행을 방지
- ▶ 주요 부처 평가 결과, 대부분의 부처에서 미흡등급 사업의 15% 배분, 지출액 구조조정 비중 총 예산액의 1%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남
 - 지출구조조정 비중이 낮은 보건복지부 등은 의무지출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비중이 높음
 - 보건복지부의 경우 지출구조조정 제외 사업이 총 평가대상 9.2조원 중 2.9조원으로 30%에 달하는 만큼, 가장 많은 성과개선계획(13개)을 제출

〈표 7〉 2021년도 주요 부처의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소관	예산액 (억원, A)	사업수				지출구조 조정 (억원, D)	비중(%)	
		(개, B)	우수	보통	미흡 (C)		미흡 (C/B)	구조조정 (D/A)
국방부	160,927	37	7	24	6	1,531	16.2	1.0
중소벤처기업부	152,494	47	9	31	7	1,431	14.9	0.9
보건복지부	97,514	85	17	55	13	636	15.3	0.7
농림축산식품부	91,795	73	14	48	11	916	15.1	1.0
환경부	75,438	57	11	37	9	939	15.8	1.2
문화체육관광부	62,969	62	12	40	10	547	16.1	0.9
산업통상자원부	55,145	67	13	44	10	459	14.9	0.8
교육부	51,128	50	10	32	8	505	16.0	1.0
해양수산부	47,230	79	15	52	12	940	15.2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721	63	12	41	10	397	15.9	1.1
인사혁신처	21,261	13	3	8	2	215	15.4	1.0
행정안전부	12,131	55	11	35	9	321	16.4	2.6

04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성과관리 강화

- ▶ 정부는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과거에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관리 제도를 종합하여, 성과관리의 기본 단위,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 확립
 - 전 부처 재정사업에 대해 기관 전략목표-성과지표에 의한 부처의 자율적 성과관리, 재정당국의 감독 및 심층 평가라는 현행 재정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정보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이로 인하여 성과 중심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성문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책임성 향상에 기여
- ▶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2021)을 통해 이전까지의 재정성과관리 체계 운영 결과를 종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선
 - 과거의 재정성과관리는 업무를 체계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형식화, 제도적 분산 등의 한계를 노출
 - 2021년도 법률에서는 성과지향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 ① 성과관리의 내용을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로 구체화
 -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성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평가 근거 마련
 - ③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 ④ 성과평가 결과 등을 저장, 활용할 수 있는 성과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⑤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성과 중심 재정운용 확대 및 강화
- ▶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대폭 성과관리의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전자 연계 요구권 설정으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정보의 전자매체를 통한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 재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
 - 2022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전면 개편

- ▶ 그간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변화는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평가 및 피평가자 피로도 경감, 기계적인 예산과 성과관리 연동 폐지를 통한 재정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각 부처의 목표 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2016년부터 일치하도록 하여 업무 중복을 경감
 - 평가 체계를 단순화하여 피로도를 해소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개선을 위한 노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재정관리 합리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평가 주기, 상위 평가 방식 등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2015년까지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통 평가지침과 양식을 기본으로, 각 부처는 사업을 3년 주기로 점검하고, 기획재정부는 메타 평가 방식으로 전수를 평가
 - 2016~2017년에는 연구개발사업을 포함시키고 평가 주기를 전 사업에 걸쳐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한 통합재정사업 평가제도 시행
 - 2018년에는 연구개발사업 평가를 다시 분리하고 기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로 환원하는 한편, 공통 평가지침과 평가보고서 표준서식을 폐지하고 상위 평가 방식을 메타 평가 방식의 전수 점검에서 80여 개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평가로 전환
- ▶ 최근의 개편에서는 환류 방식을 개선하여 다변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 2015년도 평가 이전에는 평가 결과 미흡 등급 비율을 강제 배정하고 해당 단위사업에 대한 일률적 삭감을 실시 → 단위 사업 내 성과가 우수한 세부사업이 삭감되는 일도 발생하고, 사업 성격상 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도 평가를 통한 환류가 어려웠음
 - 2016년도 환류 개선을 통해 평가 대상 사업 전체 예산의 1% 이내에서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우수 등급 사업도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제출하게 하였으며 현재도 이 틀에서 환류 수행
- ▶ 평가는 지속적으로 간소화되면서, 환류로 인한 재정관리 합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
 - 2015년까지는 평가지표를 11개로 하였으나, 이후에는 4개로 단순화
 - 2018년도 제도 개선으로 각 부처에서 지표와 배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적인 재정사업 성과관리 확대
 - 제도 개선으로 성과관리체계 단순화, 예산과 성과관리의 기계적 연동 폐지, 합리적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
 - 또한 부처 자율성 강화, 재정당국의 성과관리 전략성 강화에 기여
 - 결과지향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달성 노력과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

〈표 8〉 재정사업 자율평가 연혁

		'06~'07	'08~'10	'11~'15	'16~'17	'18~현재
평가명		재정사업자율평가			통합재정사업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대상		모든 사업의 1/3을 3년 주기로 점검			전체 사업 점검(2016년은 1/2)	
상위평가명		메타 평가				핵심사업평가
평가대상	일반재정사업					
	정보화사업					
	기금사업					
	연구개발사업					
	지특사업					
	국고보조사업					
비고		「국가재정법」 제정(2006)		dBrain성과관리 시스템 개통	재난안전, 일자리사업평가 실시	

- ▶ 2022년도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편을 통해 재정사업 평가에 의한 지출구조조정,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추진할 것을 의결
 - (재정사업평가) 일반평가, 특별평가, 보조사업평가 등 기획재정부 주관 사업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추진
 - (제도 개선) 평가표준화, 평가제도 정비 등 추진
 - ① (표준화)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에서 실시하는 재정사업 평가 대상 평가 기준, 절차,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부담 완화 및 지출 효율화
 - * R&D 평가(과기정통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중기부), 균형발전사업 평가(균발위), 일자리사업 평가(고용부), 재난안전사업 평가(행안부)
 - ② (제도 정비) 다기화된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통합 및 연계하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최근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추진방안, 결과활용 및 성과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기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발표(22.8.22.)**

- ▶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성과평가의 예산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성과평가의 예산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과 함께 지출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등 사업성과평가 개편
 - 핵심사업평가를 위한 핵심 재정사업군을 선별하여 5년간 전주기 관리
 - 사업별 성과정보 DB 구축, 온라인 재정정보 공개의 사용자 친화성 개선, 재정성과포럼 운영 등 성과관리 인프라를 확충
- ▶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해 보고할 계획임

참고

재정성과관리 관련 OECD 동향

* Government at a Glance 2021

▶ (배경) COVID19 사태로 늘어난 지출을 줄이고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재정의 노력 필요

- ▶ (지출 증대) OECD 국가 대부분에서 공공재정의 여력을 이용하여 보건·경제 위기에 대응
- ▶ (성과 모호) 2020~2021년 동안 백신 접종,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이 늘었지만 성과를 확인하기는 아직 어려운 시기임

▶ (지출 회복)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지출계획을 재조정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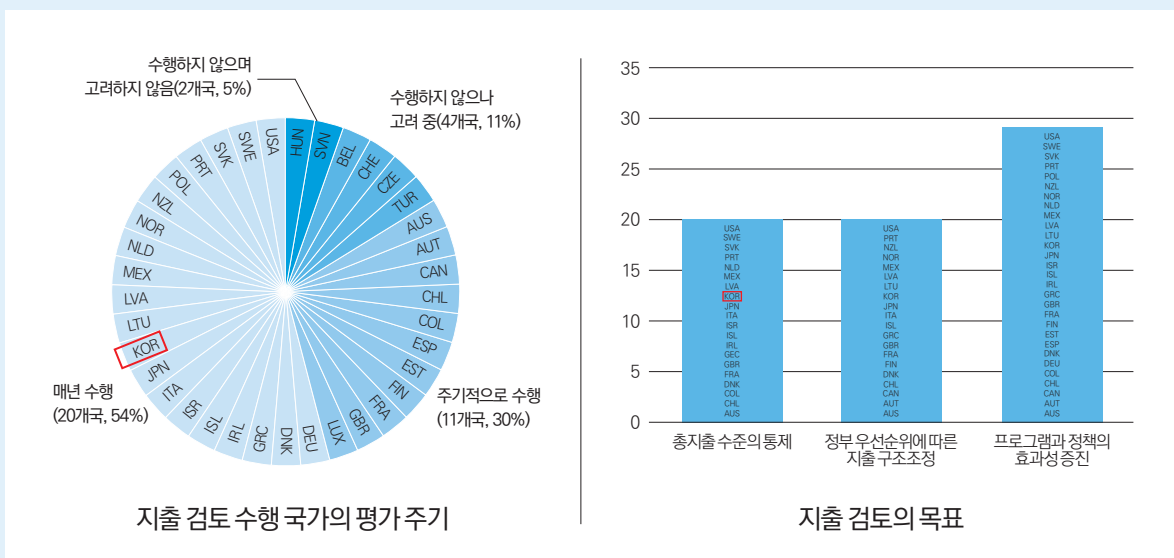
- ▶ (지출 우선순위 재설정) 지출 우선순위 조정 및 재원 재분배
- ▶ (지출 검토 시행) 집행 성과, 증거와 우선순위, 다부처 간 협력 등에 기반을 둔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시행이 바람직

* 지출 검토 제도

- (정의) 예산 과정과 연결하여, 다부처가 연관되는 특정 영역의 현재 지출 사업을 대상으로 지출 현황과 성과를 분석, 향후 지출 방향 설정
- (수행) 재정당국의 전문 분석 부서가 주도하며, 다부처가 참여
- (목적) 지출 총량 확보,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프로그램 성과 향상 등 다양한 목표로 수행

- ▶ (전략적 기획 강화) 장기 경제 성장에 부합하며, 복지 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 투자의 전략적 기획(Strategic Planning) 필요
- ▶ (재정여력 확보) 미래의 잠재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기부양책을 재검토하고 재정여력을 확보하여야 함

〈참고〉 OECD 국가들의 지출 검토 현황



05

나가며

▶ 정책적 함의

- ▶ 재정운용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은 계속되고 있음
 - 현 정부는 재정비전2050 수립을 위한 추진 과제로 성과관리 개편 및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을 해나갈 전망
 - 재정관리는 어느 한 시점에서 체제를 완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재정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함
- ▶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은 대국민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 장기적인 인적·물적 투자, 사회복지 소요 증가 등 지속적으로 재정의 투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 투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재정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 ▶ 효율성, 책임성 외에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
 - 재정성과관리의 최종 목표는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의 목표에서 성과에 이르는 전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임
 - 재정정보의 관리 및 공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재정정보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측면에서의 관리도 필요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22).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재정비전 2050 수립 본격 착수」.
_____. (2022).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_____. (2022).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_____. (2022). 중기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확정.
_____. (2021).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정부. (20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13611호.
_____. (2021).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_____. (2021). 2021회계연도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
_____. (2021). 2021회계연도 중앙관서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박정수. (2020).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 방안.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 20-03.
박노욱 외. (2018). 재정성과평가제도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8-14.
OECD. (2021). Government at a Glance 2021.